

국방 예산 매년 느는데 軍 약병화... ‘강군 대책’ 절실

소년원 출신 간부 문제의 소지 소년법상 영향 미치면 안되지만 ‘20대 초반’ 갱생 미성립 의견도 병력 부족에 현역판정기준 완화 근사·비만·평발 등 징집률 91% “직업적 예비군 전환, 기간 조정 여성 징병제 등도 고려했어야”

올해 국방예산은 52조8401억원이다. 지난해보다 5.4%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매년국방예산 증액에 힘을 쏟아오고 있지만, 오히려 국군이 ‘약병화(弱兵化)’되고 있다는 우려가 군안팎에서 나온다.

최근 군 내부에서는 소년원 출신 간부와 면제를 받아야 할 병이 함께하는 군대는 ‘폭력’과 ‘사고’로 뒤엉킨 약병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범정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소년원 출신도 군간부 임관? 초급간부 자질우려

익명의 지휘관은 7일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소년원 출신이라고 장래에 대한 제한을 뒤서는 안되겠지만, 군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간부로서 임관은 매우 우려된다”면서 “최근 사회가 유명인의 과거 ‘학교폭력(이하 학폭)’으로 시끄러운데, 지시와 통제를 해야 하는 간부가 소년원 출신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군대는 무력이라는,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을 사용하는 집단”이라며 “초급간부로서 임관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년법 제32조 5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소년



국군의 징집률은 90%를 넘어선지 오래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약병화 현상을 겪었던 일본군의 77.4%보다 높다. 과거 군에 가지 않았던 청년까지 현역판정을 받게되면 우수한 장병의 교육훈련마저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삽화=문형철 기자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1일 법무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소년 시절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도 직업 군인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간부의 선발 신원조회에서 소년부 송치나 기소유에 사건은 물론 공소권 없음(무죄 등) 사건도 모두 통보받았다.

때문에 결격사유만 통보하는 일반공무원과 범죄경력자료 전부와 수사 또는 재판중인 사건 자료를 제공받는 타 신원조회 대상의 공무원에 비하면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만, 군간부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생도 및 후보생 과정이 사회 경력이 전무한 20대 초반이기에, 소년원 처분에 대한 갱생과 충분한 반성인식이 성립되지 못하는 시기라는 점도 반영돼야 한다는 게 군 내부의 반응이다.

◆병력자원 부족과 맞물려 약병화 가속화
군의 간부선발에 소년 시설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자가 선발이 되는 것과 함께 복합적으로 약병화를 가속시키는 것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 현상이다. 병무청은 2월 17일부터 개정

된 병역판정 검사규칙을 적용했다.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고교 퇴학 이하라도 신체등급 1~3급이 나오면 현역 병으로 입영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시와 원시 등의 굴절이상 여부와 비만 정도를 측정하는 체질량지수(BMI), 평발 정도를 의미하는 편평족 등의 현역 판정기준도 완화됐다.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한 것은 출산률 급감으로 청년인구가 갈수록 감소되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국군의 징집률은 비정상적으로 높다. 이미 2013년 91%를 넘어섰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최고징집률이 77.4%, 징집대상 2780만명 중 2200만명을 동원했던 독일(당시 인구8000만)의 징집률 78%였다.

일본 군의 경우 징집병의 신체 및 체력, 학습능력 저하로 인해 부대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군을 비롯한 정부는 병력자원 부족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신조어)’하기 보다는 상비군 부족을 직업적 예비군으로 전환하거나 의무복무기간의 조정 혹은 여성의 징병제까지 고려해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초급간부 증원, 과학화로 ‘약병화’ 만회될까

국방부의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2022년까지 국군병력은 50만명으로 줄어든다. 청년 인구 감소추이는 이보다 더 빠르게 진행돼 2025년 이후에는 50만명도 충원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병력부족을 부사관과 군무원 충원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올해 군 당국은 부사관·군무원 7682명을 증원한다. 1년 간 부사관 2315명, 군무원 5367명을 뽑는 것이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2018년 2월

13일 군무원 2만명 충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 “비전투부대원을 전투부대로 보내고 빈자리는 군무원을 투입하는데 약 2만여 명이 충원하는데 4조~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현역보다 군무원이 비용이 덜드는 방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정법상 군무원은 교전권이 없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현역이 빠진 비전투부대는 유사시에 쉽게 무력화돼 임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다. 부사관을 비롯한 육군 간부의 지원자가 2030년 이후 미달될 수 있다는 내부자료 등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병 복무를 거치지 않고 대다수 간부를 모집하는 국군의 경우 자질불량 간부의 유입가능성도 높아진다.

최근 여론에서는 이보다 한발 더 나은 ‘모병제’가 떠오르고 있다. 병 입대자에게 9급 공무원 수준의 급여를 주고 모병지원으로 병력을 충원한다는 개념이다. 그렇지만 간부 계층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정치적 견해에 따른 보훈해석의 차이 등이 결합된 현실을 따져보면 우수자원의 충원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모병제인 일본의 경우 자위대원 모집에 많은 공을 쏟고 있지만, 자위대에 대한 낮은 사회인식으로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에게 위협을 전가하는 ‘경제적 징병’이라는 비난여론도 나오고 있다.

간부중심의 병력구조와 모병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병력부족을 과학화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국방과학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22사단의 경계 헛점에서 드러나듯이 군과학화는 군 정예화의 보조수단일 뿐, 병력부족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탄소중립에 필수 CCUS 개발·상용화 추진

산업부, 민간 ‘K-CCUS 추진단’ 발족 SK이노·두산중 등 95개 기관 참여

탄소중립 가속화에 필수적인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민간합동 추진단이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코엑스에서 민간합동 ‘K-CCUS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하고 민간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에는 SK이노베이션,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

양, GS칼텍스, S-Oil 등 50개 민간기업과 석유공사, 한국전력 등 10개 공기업과 학계 등 95개 기관이 참여한다.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논의가 확산되면서 배출이 불가피한 이산화탄소 처리를 위한 CCUS의 중요성이 커졌고, 그간 정부도 CCUS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상용화와 신산업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더욱 긴밀한 민간협력력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추진단은 CCUS 확산의 컨트롤 타워로서 신산업화를 위한 민관의 노력을

주도해 나가게 된다. 또 업계 기술개발 수요 파악과 정책 수요 발굴 뿐 아니라 CCUS 성과확산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는 CCUS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초기단계에 있는 전세계 기후위기에 응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다부처 사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기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실증 투자를 확대해 2025년까지 포집·저장·활용 분야별 상용화 가능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농식품 벤처 126곳에 최대 5년 자금지원

농식품부, 하반기 10명 추가선정

올해 정부가 농식품 분야 벤처 126개를 선정해 최대 5년간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의 2021년 지원대상을 선정했

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지원한 299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매출액은 74.3% 증가했고, 신규 일자리

738개 창출, 민간투자 459억원 유치 등의 성과가 나와 올해도 많은 기업의 관심이 예상됐다. 실제로 올해 지원대상을 공모한 결과 638개 기업이 신청해 5.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서류와 발표 평가를 거쳐 창업기업 86곳과 예비창업자 40명 등 최종 126개가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반기 10명의 예비창업자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600억 투입 비대면 창업기업 400곳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등 12개 부처 협업 오는 27일까지 창업자·기업 모집

정부 12개 부처가 손잡고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400곳을 적극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이달 27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여기에는 중기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이 두루 참여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신속하게 발굴, 육성하기 위해 중기부가 올해 신설한 이 사업은 당초 300억원 규모였지만 추경 편성을 통해 규모를 2배 늘렸다. 이에 따라 총 600억원으로 400개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비대면 분야를 지원한다는 것 외에도 12개 부처가 협업해 추진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며 “이는 부처별로 갖고 있는 비대면 분야별 전문성을 연계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협업은 각 부처가 소관분야 창업기업을 선별하

고 중기부와 함께 정책을 연계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12개 부처별로 소관분야가 설정돼 있으며 이들 부처는 신청한 창업기업 중 유망기업을 직접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이후 뽑힌 창업기업에 대해선 기업당 최대 1억5000만원의 중기부 창업 사업화자금과 기술·인증·관로 등 분야별 소관부처의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한다.

비대면 분야 가운데 의료는 복지부(비대면 의료), 식약처(의료기기), 교육은 교육부(온라인 교육), 산업부(에듀테크시스템), 생활·소비는 농식품부(온라인 식품), 국토부(물류·스마트도시), 생활·소비는 해수부(해운·수산), 환경부(친환경), 콘텐츠는 과기부(지역·융합미디어), 문체부(비대면 스포츠), 기반기술은 특허청(AI·보안기술), 유레카는 중기부(기타 비대면 아이템)가 각각 역할을 맡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대표자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bada@